



## 최근 經濟危機感의 실체와 대응방향

金光錫 (상임자문위원)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각계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대체로 금년초 이후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각종 지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변동되고 있다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 최근 경제위기감의 배경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어 대외경상수지 적자가 전년에 이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89억 달러에 달했던 경상수지 적자가 금년 8월말 현재 이미 133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연말까지는 200억 달러에 육박함으로써, 유사 이래 최대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상수지적자 확대는 금년들어 円低현상으로 우리 수출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의 국제시세 급락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금액의 급감에 따라 총수출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면 수입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한 高費用·低能率현상으로 특징지어지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 수출의 대외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 외국에 비해서 높은 토지가격과 금리 및 물류비용 등이 복합되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비용·저능률 구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증가율의 둔화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이 전년의 9%수준에서



7%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금년 8월까지 이미 4.4%를 기록, 연간 물가목표치(4.5%)에 근접함으로써 정부의 물가목표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적자 확대를 수반한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상승 가속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다. 금년들어 원화 환율을 시장평균환율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가절하를 유도함으로써 엔低로 인한 우리 수출의 취약한 가격경쟁력을 일부나마 회복시키려고 한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다. 경제안정화 정책을 강화하여 물가안정을 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 경기하강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과 함께 경제성장률 목표의 희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안정화정책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사실 성장과 물가목표를 불변으로 놓고 국제수지 대책을 강구한 셈이니 대책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 WTO체제하에서 무역자유화가 크게 진척되고 있고, OECD 가입조건의 충족을 위해서 외환·자본거래면의 자유화도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현 여건하에서 과거와 같은 정책적인 수입규제나 수출지원 또는 외환통제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高費用·低能率 현상의 원인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는 고비용·저능률이라는 구조적 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도 그 구조적 현상의 원인을 찾아서 올바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조적 원인으로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여파를 들 수 있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공급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自然失業率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급여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적어도 90년대 이전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았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선진공업국가의 첨단기술수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기계에 체화된 형태 또는 분리된 형태로 외국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자본뿐이었는데, 자본은 국내저축 동원과 해외자본 도입을 통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성장잠재력의 배경하에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추세는 주로 수요요인에 따라 결정되어 왔던 것이다.

최근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두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 하나가 기술제약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력부족 문제이다. 첫번째 문제는 이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을 과거처럼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체 기술개발노력을 통해서만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두번째 제약요인인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키 위해



---

그간 해외인력 수입도 크게 늘리고, 노동집약적 업종의 공장자동화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이전도 권장해 왔다. 그러나 과거 人口政策의 결과로 노동력 증가율은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현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인력부족 문제는 노동력, 즉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뿐만 아니라 소득증가에 따른 평균근로시간의 감소경향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자본스톡의 경우에는 아직 심각한 성장제약 요인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달리 고도성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30여년간 투자율(對 GDP)이 15%미만에서 약 35%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국내자본스톡이 급속도로 증대됨으로써 자본투입면에서도 고도성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율은 이제 더 이상의 증대가 거의 불가능한 높은 수준(35%)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투자율이 잘해야 35% 수준에서 안정됨으로써 투자액이 GDP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생산시설의 규모를 나타내는 총자본스톡은 현재 GDP의 약 4배정도이며, 또 계속 증대될 것임을 감안하면 연도별 투자증대로 인한 자본스톡 자체의 증가율은 점차 낮아질 것이 명백하다고 보겠다.

이것은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여러 측면에서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감소를 감안할 때 어떤 획기적 기술혁신이 없는 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GDP기준으로 1994~95년간의 약 7%수준에서 점차 둔화되어 2000년대 초반에는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NNP 기준으로는 더욱 낮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만을 표방하고 있고, 또 적어도 작년까지는 국제경제여건의 우발적인 호전에 따라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때, 즉 GDP 갭이 발생할 때 모든 부문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및 일반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도성장이 계속 가능한 것으로 믿으면서 고도성장 정책을 표방할 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전망하에서 각자의 경제활동을 전개할 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보겠다. 금년에 들어와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상수지적자, 저성장 및 고물가 현상과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비용·저능률 현상도 모두 성장잠재력을 무시한 고도성장정책 강행과 지나친 낙관적 전망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따른 반작용인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상의 소득성장 전망하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의욕적인 투자사업의 추진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됨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애로요인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높은 물류비용을 불가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투자는 고금리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 成長潛在力을 감안한 적정성장이 해결책

한 나라의 경제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이 연 9%의 고도성장을 할 때 선진국의 성장률이 3%라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머지 않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개도국이 고도성장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개발을 이룩한 다음에는 과거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성장잠재력의 소진으로 저성장기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저성장기에 소득분배개선, 산업구조조정과 기술능력 배양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진입이 결정된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경우, 70년대초까지는 9%이상의 고도성장을 했으나 그 후 성장잠재력의 감소로 90년대 초반 거품경제 해소와 관련된 불황기 이전에는 연 평균 4%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해야 했다. 또 우리나라와 함께 고도성장을 했던 대만경제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평균 6%대의 안정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30여년간 지속되던 고도성장기를 지나 이제는 선진국형 저성장기 돌입을 위한 과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9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6%정도의 안정된 GDP성장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에 알맞는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전망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은 경제 시책과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고, 기술개발 노력을 더욱 증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인 일반국민도 각자의 실현가능한 소득전망에 따라 소비수준을 낮추고 저축을 늘려 나가도록 선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와 고물가, 그리고 고비용·저능률이라는 한국병도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필자 약력

경희대학교 학사(1957)

미국 Williams 대학교 경제학 석사(1968)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1979)

주한 미 경제협조처 경제고문(1958~71)

미국 Princeton대학교 연구교수(1971~72)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부원장(1972~82)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1982~94)

한국 국제경제학회 회장(1984)

세계경제연구원 상임자문위원(1995~현재)

##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